



NARS 현안분석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2026년 중국 양회(兩會)와 우리의 대응전략

김 예 경

- ✔ 2026년 3월 중국 양회에서 향후 1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가 제시되고, '15·5 계획'이 확정됨. 또한 '생태환경법전',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국가발전계획법' 등 법률이 통과되었음
- ✔ 이번 양회에서는 2026년 중국의 대외관계와 대외정책 방향을 '친성 해융'에 기반한 주변국 외교 강화와 강대국 관계 조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도모하는 데 있음을 강조함
- ✔ 한국은 미중 간 국제정치경제질서 주도권 경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속적 소통체계 구축과 함께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축 등을 통해 통합적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됨. 또한 중국의 성·시별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모델을 도출하고, 실버산업 등 민생 중심 국민체감형 사업·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The 2026 China Two Sessions and Our Strategic Response



I

들어가며

2026년 3월 4일~12일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는 향후 1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 및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이하 ‘15·5 계획’) 시작의 원년으로 향후 5년간 중국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보고서는 양회 기간 리창(李強)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2026년 정부업무보고¹⁾와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²⁾ 내용 등을 토대로 2026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 및 외교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고, 중국의 정책 방향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2025년 중국 정부 업무 평가

2025년 복잡한 대내외환경 속 건조한 성장세 유지

리창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 업무를 회고하면서, 2025년 중국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건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제14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GDP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140조 1,900억 위안을 기록했고, 도시 신규 일자리 1,267만 개 창출과 평균 실업률 5.2% 유지로 고용 안정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따르면, 경제 운용 면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했다. 통화 측면에서는 정책금리 및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시중 유동성을 확대했고, 재정 측면에서는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이구환신, 以舊換新)을 강화해 내수를 진작했다. 그 결과 총 소비재 소매판매액이 50조 위안을 돌파했으며, 설비 구매 투자는 11.8% 증가했다.

또한 산업·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인공지능, 바이오의학, 양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달성했으며, 항공모함 무전함 취역, 독자 칩 개발 성과 등 첨단 산업 역량을 강화했다. 신에너지차 연간 생산량은 1,600만 대를 넘어섰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5.1% 감소해 녹색 전환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민생 부문에서는 1,400만 명 아동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 실시, 3,000만 명 이상 영유아 보육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3억 명 포괄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국내외 관광객은 각각 16.2%,

1) 「政府工作报告: 2026年3月5日在第十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上」, 『中国政府网』, 2026.3.13.

2) 「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新华网』, 2026.3.8.

17.1% 증가하며 내수 활력도 회복됐다.

대외관계 면에서 중국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자주의와 개방적 협력 기조를 견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5차례에 걸친 경제·무역 협의를 통해 긍정적 성과를 도출했으며, 부산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2025.10.30.)에서는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져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에 안정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은 6.1% 성장했고,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수도 19.1% 증가했다. APEC, G20, BRICS 등 주요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리창 총리는 내수 소비·투자 동력 부족, 부동산 시장 조정 지속, 지방 재정 불균형, 공공서비스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보호주의 심화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 여건과 제도적 강점은 변함없다고 강조하며, 질적 발전을 향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Ⅲ

2026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

2026년
‘15·5계획’
시작의 첫 해,
질적 발전과
안정적 성장
동시 추구

가. 제15차 5개년 계획 목표 및 주요 계획

2026년은 ‘15·5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다. 2025년 10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계획 수립에 관한 건의가 채택되었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계획안이 2026년 3월 전인대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되었다. 동 계획의 주요 목표 및 전략적 과제와 세부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목표 및 지표

이번 2026년 양회에서 확정된 ‘15·5 계획’은 질적 성장과 안보 강화를 골자로 경제, 혁신, 민생, 녹색 전환, 안보 등 5개 분야의 20개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GDP 성장률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유지하되,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두 배로 늘려 중진국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한다. 혁신 분야에서는 사회 전체 연구개발 지출의 연평균 성장률을 7% 이상 달성하고, 핵심 디지털 경제 산업의 부가가치를 GDP의 12.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고용·소득·교육·의료·건강·노인·아동 등 7개 영역의 구체적 지표를 설정 하였으며, 평균 수명 80세 달성과 근로 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를 11.7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녹색 전환 분야에서는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누적 17% 감축하고, 식량·에너지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 안보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2. 주요 전략적 과제

15·5 계획의 전략적 과제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첫째,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첨단 제조업 중심의 현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호를 병행하는 녹색 발전을 추진한다. 둘째, 복잡한 대외 환경에 대응하여 내수 확대 전략을 강화하고, 가계 소비율 제고와 유효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 순환의 자생력을 높인다.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통해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을 해소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포함된다. 셋째,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출산 친화적 사회 구축, 고령화 대응, 도농 격차 해소, 빈곤 퇴치 성과 유지 등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 산업 발전과 국민 정신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넷째, 안보와 발전의 조화를 강조하여 식량 생산능력 1조 4,500억 근, 표준 석탄 58억 톤 확보를 목표로 하고, 부동산·지방 부채·금융 리스크의 질서 있는 해소를 추진한다.

3. 주요 프로젝트 및 추진 방향

15·5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6개 분야에서 총 109개의 주요 사업이 제안되었다. 신생 산력 발전 분야 28개, 현대화 사회기반시설 구축 분야 23개, 도농 통합 발전 분야 9개, 민생 보장 분야 25개, 녹색·저탄소 전환 분야 18개, 핵심 안보 분야 6개로 구성된다. 사업의 범위는 물리적 인프라 투자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의료, 노인·아동 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를 포괄하여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자원 조달 방식에서는 정부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과 사회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취약 분야의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식 현대화의 실현이라는 장기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표 1 '15·5 계획' 20개 지표 목표

구분	번호	분야	2025년 현황	2030년 목표
경제 발전	1	GDP 성장률	5.0%	합리적 구간 유지 (연도별상황에 따라 제시)
	2	전원노동생산성 증가율	GDP 증가와 유사 수준	GDP 증가율 이상
	3	상주인구 도시화율	67.9%	71%
혁신 구동	4	사회 전체 R&D 투입액 연평균 증가율	GDP 대비 2.8% (14·5기간 연평균 10%증가)	연평균 7% 이상 증가
	5	만 명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	16건	22건 이상
	6	디지털경제 핵심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10.5%	12.5%
민생 복지	7	도시 조사 실업률	평균 5.2%	5.5% 이내 통제
	8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GDP 증가와 동기화 (14·5기간 연평균 5.4%)	GDP 증가와 동기화
	9	노동연령 인구 평균 교육 연한	11.3년	11.7년
	10	1000 명당 집업의사(면허의사) 수 (1000 명당 등록 간호사 수)	약 3.4명 (약 4.3명)	3.7명 (5.1명)
	11	3세 미만 영유아 탁아율	-	연평균 6%p 향상
	12	양로기관 간호 병상 비중	68%	73%
	13	기대수명	79.25세	80세

녹색 저탄소	14	단위 GDP 이산화탄소 배출 누적 감소율	만 위안 GDP당 CO ₂ 전년대비 5% 감소	누적 17% 감소
	15	비화석에너지 소비 총량 대비 비중	21.7%	목표치 상향 예정 (비화석에너지 10년 2배 확충 계획 병행 추진)
	16	지급(地級) 이상 도시 PM2.5 농도	28 μ g/m ³ (전년대비 4.4% 감소)	지속 감소
	17	지표수 우량(Ⅲ류 이상) 비율	91.4% (90% 초과)	지속 향상
	18	삼림 피복률	25% 이상	지속 향상
안전 보장	19	식량 종합 생산능력	1.43조 근(斤)	1.45조 근 이상
	20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	51.3억 톤 표준석탄 (첫 50억 톤 돌파·비화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화석에너지 초과)	58억 톤 표준석탄

출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2026.3.5.)

나. 2026년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주요 목표

15·5 계획이 시작되는 2026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과 주요 목표는 단순한 양적 성장 보다는 시진핑 사상에 기반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아래 질적 발전과 안정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전략하에 설정되었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낮추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수 위축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으로 분석된다. 통화정책은 온건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 등의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술 혁신과 중소기업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위안화 환율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예산은 7%로 전년대비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증액하여 군 현대화와 안보 강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번 보고는 내수 확대, 구조적 개혁, 위험 예방을 3대 축으로 삼아,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질적 성장의 균형을 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2 2026년 중국 사회·경제 및 외교·국방 주요 지표 목표

번호	분야	2025년 (전년목표)	2026년 (당해목표)	전년대비 (기조)
1	GDP 성장률	5.0% 정도	4.5~5% 정도	하향
2	도시 조사 실업률	5.5% 정도	5.3% 정도	유지/소폭 개선
3	신규 고용	1,200만명 이상	1,200만명 이상	유지
4	물가상승률(CPI)	2% 정도	3% 정도	상향
5	재정 적자율	4%	3% 정도(기본)	관리/유지
6	지방정부 특수채	4.4조 위안	4.4조 위안	유지
7	특별 국채	3조 위안	1조 위안(초장기)	관리
8	외교예산 증가율	8.4%	기조 유지	지속
9	국방예산 증가율	7.2%	7.0%	소폭 둔화

출처: 2025년 및 2026년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및 양회기간 발표된 공식 보도자료 참조

다. 2026년 정부 업무 과제

2026년 정부 주요 업무 과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 성장 동력 확보다. 2,500억 위안 국채 발행과 7,550억 위안 인프라 투자로 내수를 살리고, AI·바이오·집적회로 등 신흥산업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진다. 여기에 통일 국가 시장 구축, 조세·금융 개혁, 민간 기업 참여 보장 등 제도 개혁을 병행해 시장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대내외 구조 전환이다. 베이징·상하이·광둥에 국제 혁신 센터를 구축해 과학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CPTPP 가입과 외국인 투자의 내국민 대우 보장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한다. 서부·동북·중부·동부 4대 지역 균형 전략과 세계적 도시 클러스터 육성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나선다.

셋째,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강화다. 곡물 생산 능력 확충과 농촌 토지 개혁으로 식량 안보를 지키고, 노령연금 인상·의료보험 확대·청년 고용 지원으로 민생을 보호한다. 탄소 이중 관리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으로 탄소 중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부동산·지방 부채·금융 리스크 관리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 3 2026년 정부 주요 과제

번호	분야	핵심 주제	주요 내용
1	내수시장	소비·투자 확대	2,500억 위안 국채로 소비 촉진, 1,000억 위안 내수 기금 조성, 인프라에 7,550억 위안 배정해 민간 투자 유도
2	신성장 동력	AI·신흥 산업	“AI+” 전략으로 집적회로·바이오·저고도경제 등 신흥산업 육성, 지능형 제조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가속화
3	과학기술 자립	혁신센터·인재	베이징·상하이·광둥에 국제혁신센터 구축, 기초연구 투자 확대, 첨단 기술 기업에 자금 조달 녹색 채널(绿色通道) 제공
4	핵심 개혁	시장·조세·금융	통일국가시장 구축, 소비세 및 지방세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민간 기업 공정 참여 제도적 보장
5	대외개방	개방 확대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CPTPP 가입 추진, 외국인 투자 내국민 대우 보장, 일대일로 고품질 협력 강화
6	농촌 활성화	식량 안보	곡물 생산 능력 1,000억 근 확충, 토지계약 30년 연장 시범 전면 시행, 빈곤 퇴치 성과 공고화
7	지역 균형	도시화·지역 전략	서부·동북·중부·동부 4대 지역 전략 추진,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세계적 도시 클러스터 육성
8	민생 강화	고용·복지	노령연금 월 20위안 인상, 의료보험 보조금 24위안 확대, 청년 고용 지원, 보육 서비스 확충
9	녹색 전환	탄소 중립	탄소배출량 집약도 이중관리 도입,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형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로 단계적 탄소 중립 추진
10	위험 예방	부채·금융·안정	부동산 재고 축소,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해소,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재해조기 경보 및 사회 화합 증진

출처: 2026년 전인대 정부업무보고(2026.3.5.) 참조

라. 주요 법률 동향

2026년 3월 양회 폐막일인 3월 12일 전인대에서 ‘생태환경법전(生态环境法典)’, ‘민족단결

진보촉진법(民族团结进步促进法)’, ‘국가발전계획법(国家发展规划法)’ 이 차례로 통과되었다. 최근 들어 한 번의 전인대에서 세 가지 중요한 법률이 동시에 통과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모두 표결 결과 반대나 기권이 한 자릿수에 그치며 사실상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³⁾

1. 생태환경법전

제14기 전인대 제4차 회의는 2026년 3월 12일 생태환경법전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법전은 민법전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전으로, 총 5편 1,24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전 시행과 동시에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토양오염 방지법,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등 기존 10개 법률은 폐지된다.

주요 내용으로서 제4편 ‘녹색 저탄소 발전편’은 생태환경법전의 최대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분의 거래시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책임 연장제도를 신설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⁴⁾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되어, 탄소배출 할당량 미상쇄 시 시장 평균가의 5~10배 과징금 및 생산 정지 명령이 가능하고, 배출 허가증 미취득 배출의 경우 최대 100만 위안(기존 대비 5배)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2.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내의 민족 관련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일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제외하고 네 번째로 ‘서언(序言)’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 법체계에서 매우 예외적이고 높은 위상을 갖는다. 중국 역사상 일반 법률 중 서언이 들어간 사례는 홍콩기본법, 마카오기본법, 반분열국가법 등 국가 통합 및 안보와 직결된 법률이 유일했다.

이 법률은 교육·주택·이민·공동체 생활·문화·관광 및 개발 정책을 통해 민족 집단 간의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도 중국 표준어인 보통화(普通话) 지위를 강화하여 학교 교육과 정부 공식 업무의 기본 언어로 채택하고, 국외 민족 분열행위 처벌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3. 국가발전계획법

국가발전계획법 초안은 2025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먼저 심의를 거쳤으며, 이후 2026년 3월 12일 전인대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중국의 5개년 계획 등 국가 발전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전 과정을 법제화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담은 ‘15·5 계획’ 채택과 맞물려 국가 발전 계획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 「三部重要法律通过“十五五”开局标注国家立法新刻度」, 『新华网』, 2026.3.13.

4) 전기전자·자동차 등 제품 생산자의 폐제품 회수 체계 의무화, 동력전지 폐기물 처리 의무 명시,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 폐기 처리 책임 제도화 등

IV

2026년 중국의 대외관계 및 대외정책 방향

2026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대외관계와 대외정책 방향은 주변국 외교 강화와 강대국 관계 조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도모하는 데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5·5 계획'과 연계하여 고품질 발전과 일대일로로 통한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주권 수호를 강경히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⁵⁾

이번 양회에서 한중 관계나 한반도 현안이 전면에 부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의 대외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올해 1월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이미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번 양회에서는 외교적 관리 상태에 들어간 한중 관계보다는, 당장 시급한 쟁점으로 부각된 미중 정상회담 준비, 최근 급격히 악화된 중일관계 대응, 중동전쟁 등 현안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 석상에서의 언급 빈도와 무관하게, 중국의 중장기 대외관계와 대외정책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한중관계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가. 대외관계 및 지역별 주요 현안

1. 대국 관계

(미중 관계) 2026년을 양국 관계의 '중요한 해(大年)'로 규정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을 위한 마지노선(底线)을 수호하며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러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법 권위 수호 및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 대한 올바른 사관을 공유하며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공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중일 관계)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 및 집단 자위권 정당화 시도에 대해 평화헌법 훼손과 군국주의 회귀라는 관점에서 강한 우려와 경각심을 표명하고 있다.

(유럽 관계) 영국·독일 등 주요국과의 고위급 대화 재개 및 무역액 1조 달러 돌파와 유럽 관광객 200만 명 이상 무비자 입국 등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유럽을 다극화된 세계의 핵심축이자 국제 질서 유지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2. 주변 및 글로벌 사우스 관계

(중인 관계) 2025년 텐진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로를 '기회'로 인식하는 전략적 신뢰를 구축

5) 「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新华社』, 2026.3.8.

하며, 접경 지역 안정과 2026년 인도의 브릭스 의장국 수임 지지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협력을 주도하자는 입장이다.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관계) 수교 70주년을 맞은 아프리카에 전면 무관세 혜택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중남미 국가들과는 공동 운명체 건설을 추진하며,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 글로벌 이슈 및 지역 분쟁 해결

(중동 및 이란 문제) 주권 존중과 무력 사용 반대 등 5대 원칙을 바탕으로 이란 전쟁의 휴전 및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며,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동의 평화 회복에 기여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 ‘두 국가 해법’을 유일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국제사회와 유엔이 주도적인 책임을 갖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 남중국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 COC)의 연내 타결을 추진하며,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 해양 공동 개발을 지속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등 갈등 관리 노력을 병행하여 역내 안정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4. 주권 및 핵심이익 수호

(대만 문제) 대만 문제를 중국의 내정 및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인 절대적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조국(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천명하고 있다.

나. 대외정책 기조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제질서 재편) 유엔을 중심에 둔 다자주의와 국제법 기반의 질서를 강조하며, 강대국의 패권주의와 ‘강대국(미중) 공동 통치(大同共治)’라는 논리를 거부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 건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주권 평등, 국제법치, 다자주의, 인민 중심, 행동 지향 등 5개 개념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삼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제 구축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강화) 중국을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BRICS와 SCO, ‘G77(유엔 개도국 연합체)+ 중국’ 등 다자 플랫폼을 통해 서방의 패권주의에 맞서는 정치적·이념적·경제적 결집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자주의를 글로벌 사우스의 ‘보호막’으로 삼아, 이들 국가와 함께 현대화의 길을 걷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변외교 강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우호, 성실, 상호 이익, 포용을 뜻하는 ‘친성혜용(亲诚惠容)’이 주변외교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5년 당 중앙이 처음 개최한 주변공작회의에서

‘주변운명공동체’ 건설이 주변외교의 목표로 제시되었다. 선린주의와 안보, 번영 정책을 고수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개방적 지역주의와 진정한 다자주의를 옹호함으로써 주변국들과의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의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세계화와 고도 개방 정책 추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시장’으로서 고도의 개방 정책을 확대하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지지하고 있다. 2026년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제33회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아태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그간의 청사진을 구체적인 행동과 현실로 전환하여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안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은 전쟁, 빈곤, 불의 등 인류 공통의 도전에 맞서 단결과 협력을 강조하며, 100여 개국과 국제기구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보편적 안보를 갖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강대국의 팽창주의를 답습하지 않고,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며, 지속적인 평화·보편적 안보·공동 번영·개방과 포용·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갖춘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대외전략 비전을 유지하고 있다.

V 우리의 대응전략

가. 미중 간 국제정치경제질서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필요

현재 미중 경쟁은 군사, 외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무역과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일방주의·무역보호주의를 기조로 국제정치경제질서를 ‘Post-WTO’ 체제로 재편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25년 8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같은 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된 미-EU 양자 무역 합의를 기점으로 WTO 체제의 종식과 ‘턴베리 체제(Turnberry System)’⁶⁾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 체제는 관세와 양자 협정을 결합해 미국의 국익을 관철하는 통상 모델로, 약속 불이행 시 즉각적인 관세 보복을 예고하는 강제 이행 메커니즘을 핵심으로 한다.

“
현 국제정치경제질서 변화에 따른 통합적 대응 전략 수립 위해, 상설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축이 요구된다.”

반면 중국은 주권 평등·국제 법치·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미국 주도의 일방적 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다. 특히 2026년 APEC 의장국으로서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를 제고할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천명하며, BRICS·SCO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양자·조건부

6)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역사적 무역 합의를 체결한 스코틀랜드 리조트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다. 박정현,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턴베리 체제)와 한국의 대응”,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2026.1.19.

블록화'를 지향하는 미국과 '다자·개방·연대'를 표방하는 중국 간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주도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 정부의 대외전략은 '국익중심의 외교안보'를 기치로 내걸고, 주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한 현안별·사안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간 국제정치경제질서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도 단순한 현안 대응을 넘어서 거시적 안목을 갖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외교안보적 역학 관계와 무역통상 질서가 긴밀히 연계되는 '경제안보 동조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부처별 개별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핵심 관계 부처를 주축으로 삼아, 현 국제정치경제질서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상설 범정부 태스크포스의 구축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통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⁷⁾

나. 한중 간 지속적 소통 체계 구축

중국의 대외관계 및 대외정책에서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은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지난해와 올해 초 개최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미중 갈등이나 주변국 정세 변화가 한중관계에 미칠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중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메시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 소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2024년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9년 만에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신설된 '2+2 외교 안보대화'를 정례화하여 양국 간 외교·안보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의 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양국 간 민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만문제와 관련해서, 1992년 수교 당시 합의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중국측에 꾸준히 전달해야 한다. 미중 및 중일 간 갈등 고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방지하고, 관련 메시지를 신중하고 일관되게 관리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병행해서 가동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 지방정부로 대중국 외교관계 범위의 확대 및 정책 세분화

지난 3월 양회 개최에 앞서 전국 31개 성·시·자치구에서도 지방 양회가 잇따라 개최되어 2025년 성과를 총괄하고 2026년 주요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확정했다.⁸⁾ 이들 31개 성급 가중 평균 목표는 약 5.03%로 2025년의 5.3%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었지만, AI·디지털·스마트제조 중심의 신형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며, 전통산업의 스마트화·녹색화 전환을 통한 '이중 트랙'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취업·양로·출산·소비 등 민생 안정에 투자하는 내수 진작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각 성·시별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가 상이한바, 한국의 대중국 관계 범위를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별로 세분화해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간 민감 현안에 대해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소통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7) 대한민국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025.8.13., pp. 198-202.

8) 「“十五五”如何开局? 地方两会的十大要点」, 『新浪财经』, 2026.2.6.; 「地方两会陆续召开, “十五五”开局之年各地准备怎么干?」, 『央视新闻』, 2026.1.29.

“중국의 성·시별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모델 도출과 다각적 지방외교 채널가 동해야”

2026년 베이징은 약 5%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으며, AI와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25년 AI 핵심산업 규모는 4,500억 위안으로, 전국 절반 수준인 2,500여 개 AI 기업이 베이징에 집중되어 있다. 2025년 광둥성 GDP는 3.9%에 그쳤지만, 37년 연속 전국 경제총량 1위를 유지했으며, 대외무역 규모는 40년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편 산업 로봇 생산량은 국가 생산량 40%, 디지털 경제 규모는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저장성은 2025년 GDP를 9조 4,545억 위안을 기록하며 10조 위안에 육박했고, 전국 평균(5.0%)을 상회하는 5.5% 성장을 달성했다. 2025년 저장성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 매출은 약 6,800억 위안(한화 약 125조 원)을 기록하며 20% 이상 성장했다. 특히 알리바바의 ‘통이치 엔원(Qwen)’, ‘딥시크(DeepSeek)’ 등 범용 AI 모델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항저우의 ‘6소룡(六小龙, 6대 핵심 스타트업)’⁹⁾ 등 신예 혁신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으며 부상했다. 2026년 저장성의 성장 상한 목표는 5.5%로 전국 성급 행정구 중 최고 수준이다.

허난성은 철강, 석탄, 비철금속 등 10대 전통산업의 스마트화·녹색화 중점 및 소비 진작 정책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저우(郑州)·신샹(新乡)을 유통 혁신 시범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3년 연속 정부 보고서에 반영된 ‘팡둥라이(胖东来) 모델’을 앞세워 우수 소매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하며 제조·유통 혁신을 동시 추진 중이다.¹⁰⁾

후베이성은 2026년 10대 민생사업에 ‘혼인 및 이성 교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주목 받았으며, 연 1,000회 실시하겠다는 계획으로, 최근 중국 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과거 복지 위주였던 민생 프로젝트에 ‘국가가 주도하는 소개팅’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포함되는 추세다. 광둥, 베이징, 허난 등 여타 성·시도 저소득층 지원 수준 향상, 고졸자 취업 서비스 강화(연 6,000회 이상 채용 박람회, 3만명 이상 취업 인턴십), 공공 양로기관 돌봄 역량 확충 등 보편적·기초적 민생 보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 외교부는 ‘15·5 계획’에 따라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 인적 교류 촉진, △ 지방도시의 국제화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를 핵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¹¹⁾ 특히 ‘주중 외교사절의 지방 방문(驻华使节地方行)’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며,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외교 서비스 정보 플랫폼(外交服务‘十五五’高质量发展信息平台)” 구축을 가속화하여 지방이 국제 자원에 접근하고, 통치 경험을 교류하며, 대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외교가 지방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¹²⁾ 그만큼 중국의 대외관계에서도 지방정부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9) 딥시크(DeepSeek, 深度求索), 유니트리(Unitree, 宇树科技), 게임 사이언스(Game Science, 游戏科学), 딥로보틱스(DeepRobotics, 云深处科技), 브레인코(BrainCo, 强脑科技), 매니코어 테크(Manycore, 群核科技)

10) 중국 내에서 ‘최고의 서비스와 윤리 경영’으로 정평이 난 유통 기업 ‘팡둥라이’의 경영 노하우를 업계 전반에 보급하고 확산시킨다는 취지임, 「중국 내륙도시로 내려가는 기업들… 대도시 무한경쟁 지쳐 성장하는 시장에 눈길」, 『한겨레』, 2026.2.7.; 서재근, 「코트라, ‘팡둥라이’와 中 시장 진출 지원 맞손」, 『헤럴드경제』, 2025.2.28.

11) 「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新华社』, 2026.3.8.

12) 최지원, 박민숙, 「최근 중국의 대한민국 투자 증가 배경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8 No. 33, 2025.8.7.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한국은 대중국 경제 협력의 지평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국의 각 지방 정부로 대폭 확대하고, 성·시별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적 협력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단일한 단위로 접근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첨단 제조, 바이오, 친환경 등 각 지방의 강점 산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협력 모델을 도출하고 다각적인 지방 외교 채널을 가동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층적·세분화된 대외 경제안보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4 2026년 중국의 주요 성·시 성장 목표 및 중점 산업

지역	2026년 GDP 목표	2025년 GDP 실적	중점 산업
베이징	5%	5.4%	- AI, 신에너지차, 로봇, 상업우주항공 등 중점 프로젝트 추진 6G, 양자과학, 바이오제조 등 신 성장 동력 육성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고온초전도 분야 신행 연구혁신 플랫폼 구축 - 교육·의료·양로·택아 등 서비스 소비 확대, 민간자본 대상 2,000억 위안 이상 프로젝트 추진
광둥	4.5~5%	3.9%	- 제조업 근간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에 집중하며 5개 가속 전략 제시 ① 전통산업 최적화·고도화 ② 신흥산업 성장·확대 ③ 미래산업형성 ④ 서비스업 고품질·효율적 발전 ⑤ 중점산업 발전·신행 전문 경제형태 육성 - 특히, 스마트로봇·신에너지차·스마트커넥티드카 등 분야의 신성장 기동 산업 육성
저장	5~5.5%	5.5%	- 신소재, 신에너지, 집적회로(IC) 등 신흥 산업 클러스터 발전 지원 - 전략적 신흥 산업 부가가치가 규모 이상공업(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제조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35% 내외 달성 -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 7% 성장 - AI 플랫폼인 '모다 커뮤니티(魔搭社区, ModelScope)' 국제 오픈소스 커뮤니티 육성, 국가 데이터요소 종합시험구 구축 - 자율주행·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등 스마트 단말 산업 발전 육성
허난	5%	5.6%	- 철강, 석탄, 비철금속 등 10대 전통산업의 스마트화·녹색화 - 소비재 보상판매인 이구환신(以旧换新) 소비 촉진 정책 최적화 - 정저우·신상 중심 전국 유통업 혁신 시범도시 건설 가속화 3년 연속 정부 보고서에 '팡둥라이(胖东来)'¹³⁾모델* 언급, 우수 소매 서비스 모델 전국 확산

* 팡둥라이 모델: 중국 내에서 '최고의 서비스와 윤리 경영'으로 정평이 난 유통 기업 '팡둥라이'의 경영 노하우를 업계 전반에 보급하고 확산시킨다는 취지 출처: 『新浪财经』(2026.2.6.), 『央视新闻』(2026.1.29.) 등 참조

라. 실버산업 등 국민체감형 한중 협력 분야 발굴 필요

“한중간 실버산업 협력 등 민생 중심 국민 체감형 정책 우선 발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 한중 협력에 있어 민생 중심 국민체감형 정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실버산업 협력 등은 양국 간 상호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실천적 협력 과제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¹⁴⁾

한국은 최근 초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돌봄 인력의

13) 「중국 내륙도시로 내려가는 기업들… 대도시 무한경쟁 지쳐 성장하는 시장에 눈길」, 『한겨레』, 2026.2.7.; 서재근, 「코트라, '팡둥라이'와 中 시장 진출 지원 맞손」, 『헤럴드경제』, 2025.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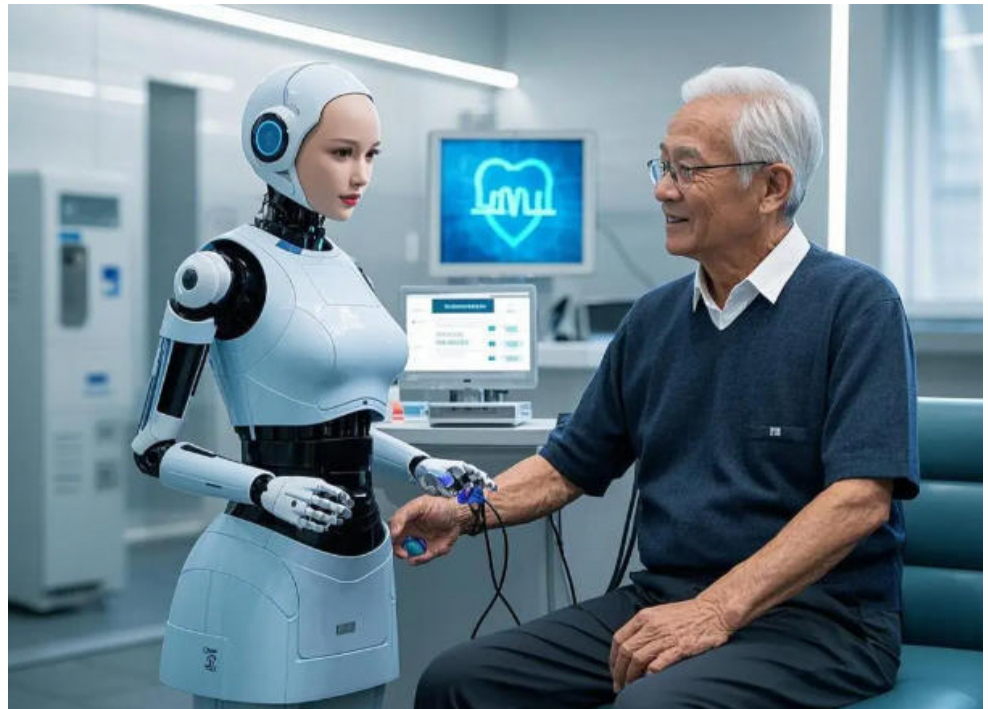
14) 김예경, 「한국도 중국도 '민생'이 먼저다」, 『조선비즈』 통권 623호, 2026.2.11.; 이오성, 「미국이든, 중국이든, 단호하게 대응하라」, 『시사인』, 2025.12.4.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돌봄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다양한 돌봄 로봇 R&D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실증 및 상용화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국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이창 뉴타운)에 구축된 세계 최초 ‘스마트 로봇 노인 돌봄 센터(智慧康养机器人养老驿站)’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 기술 협력 및 서비스 모델 공동 개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¹⁶⁾ 이 노인돌봄센터는 40여 로봇이 사람 대신 요리를 하고 밥상까지 차리는 등 의료·보건·건강 등 전 영역의 돌봄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화라는 공통의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중 양국이 실버산업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의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향후 다양한 사회·경제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림 로봇 의료 도우미



출처: 뉴스핌

15) 권정현,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KDI Focus』 Vol. 152, 2026, p. 10.

16) 최현규, 「요리에다 뜬 까지 척척, 中 세계최초 AI 로봇직원 양로 시설 문열어」, 『뉴스핌』, 2026.3.13.; 「北京打造全球首个智慧康养机器人养老驿站」, 『北京日报』, 2026.3.17.

REPORT·LIST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41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전주기 관리 체계로의 전환 태양광·풍력·ESS의 폐기물 발생 전망과 제도개선 방향	2026.05.18.	김경민
제415호	미성년 청소년 부모의 '주소 없는 삶' 전입제한이 만든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입법 과제	2026.04.21.	허민숙
제414호	비례대표 의석배분 저지규정의 현황과 쟁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미와 평가	2026.04.14.	허석재
제413호	'일하는 장애인'의 빈곤탈출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미국·프랑스·일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26.04.14.	정용제
제412호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 주요 5개국의 의사인력 지역배치의 입지규제 및 유인정책 비교 분석	2026.04.13.	김은정
제411호	잠자는 페이·머니는 누구의 것인가?	2026.04.13.	이수진
제410호	축소사회를 전제로 한 일본의 지방창생 2.0 특징과 시사점	2026.04.12.	하혜영
제409호	FACT CHEC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현실	2026.04.06.	유재국·김진수·박재영
제40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의 역할과 정책과제	2026.04.06.	장영진
제407호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월경권 가격 이슈를 넘어 건강과 인권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생리대 문제	2026.04.02.	허민숙·한진옥
제406호	EU 「1회용 플라스틱 지침」 이행결과와 국내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의 정비 과제	2026.04.01.	김경민
제405호	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비대면 투표 도입 방안 OECD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도입 쟁점 및 시사점	2026.04.01.	김현아·송진미
제404호	대북특사 파견 사례 분석과 정책적 고려사항	2026.04.01.	정경윤·이승열
제403호	산업-통상 넥서스 3대 축:산업정책 안보화, 공급망 블록화, 시장접근 조건화 2026년 주목해야 할 미국·중국·EU 3대 경제권의 산업-통상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 과제	2026.03.30.	최정윤
제402호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과 함께 정부의 교과서 공급체계 전면 개선 필요	2026.03.26.	김범주·백지연
제401호	기본부터 다시 갖춰야할 정보보호 체계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 분석 및 제도 개선과제	2026.03.26.	강은수·박소영
제400호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 유학생 유치와 아동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필요	2026.03.15.	조인식
제399호	그린란드 이슈와 미-유럽 관계 전망 미 거래주의 외교 정책으로 인한 국제질서 다극화와 시사점	2026.03.10.	심성은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2026년 중국 양회(兩會)와 우리의 대응전략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저 자 | 김예경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원, 정치학 박사
02-6788-4551 ykmkim@assembly.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1614-14
ISSN 2586-565X